

특정감사

감 사 보 고 서

- 교통지원금 부정수령 관련 -

2025. 1.

해 양 경 찰 청

I 감사결과

1. 감사배경

「서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감사」기간(2024. 6. 17. ~ 7. 26.) 중 교통지원금(단신부임비)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영수증 등을 사용한 청구·수령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, 내부통제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024. 7. 26.부터 12. 20.까지 「교통지원금 부정수령 관련 특정감사」를 실시하였다.

2. 감사실시 과정

대상업무와 관련한 그간의 예산 부정수령 유사 감사사례¹⁾ 등을 토대로 감사방향을 구체화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감사 기간 자료수집을 시작한 후 별도 감사를 통해 같은 해 12. 20.까지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교통지원금 수령자(3년간 누계인원 405명)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.

특히 감사자별로 교차하여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.

3. 총 괄

합 계			변상 명령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 (인원)	기관 경고	기관 주의	경고 (인원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 보				직무 고발 (인원)
건수	금액 (원)	인원										일반	시정 완료 (금액)	인사 자료 (인원)	비위 (인원)	
6	14,058,560	83명		1 (17명)	1 (18명)			1 (31명)	1 (15명)			1				1 (2명)

1) “〇〇시 공무원 가족수당 부정수령 전수점검”(KBS, 2024. 2. 15.), “부당초과근무 부정수령 183명 〇〇시 감사결과 보고서”(감사원, 2024. 3. 28.), “공무원 초과수당 부정수령 의혹...정부 연 2회 점검 지시”(뉴시스, 2024. 8. 1.)

4. 점검 결과

최근 3년간(2022 ~ 2024. 11월) 교통지원금 지급 합계금액 5억 4천만 원을 집행, 점검 결과 교통지원금 수령자 누계 405명 중 83명이 부정수령 관련자로 확인(부정수령액 계 14백만 원, 1인 최저금액 700원 ~ 최대 금액 449만 원)되었다.

이에 부정수령 관련자 처분기준은 부정수령 행위의 금액규모, 횟수, 집행기준 위반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해당 비위의 동기·경위·방법 및 행위 정도 등을 고려,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.

부정수령 행위자 처분·판단 기준 (감사심의회 결정)

✓ 부정수령 3회(편도) 이상자에 대해 처분 원칙.....「감사원 처분 사례」 준용

※ 감사원의 2023년 ○○시 종합감사 시 초과근무 부정수령 3회 이상자를 처분대상으로 하였음

✓ 「교통지원금(단신부임비) 세부운영지침」 기준 상 “모호한 부분”에 대해서는 운영 주관 부서인 운영지원과(복지계)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처분기준에 반영

① (직무고발) 의무위반행위가 심하고 정상참작 여지가 없으며 법령과 규정을 악용,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횟수, 수법 등을 고려

② (징계)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 ➡ 허위영수증은 단 1회라도 징계, 초과근무 중복 3회 이상

③ (경고)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➡ 영수증 누락, 중복 청구 등 3회 이상

④ (주의)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➡ 과다청구, 비정상 경로 청구 등 3회 미만

⑤ (시정)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 ➡ 단순 과다청구 1회 및 주관부서 책임

이와 같이 감사심의회에서는 부정수령행위로 확인된 자에 대해 부정수령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, 부정수령 관련자 각각의 고의성 정도 등을 고려, ①직무고발(수사), ②징계요구(중·경징계), ③감사처분(경고, 주의) ④시정(환수) 등을 결정하였다.

5. 조치 내용

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사심의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교통지원금 지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호한 집행기준을 재정비 및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통보

- **(직무고발)** 고비난성 비위행위자(2명) 직무고발 조치
- **(징계요구)**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된 비위행위자(17명)는 감찰팀에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통보(재심의 기간 이후 진행)
- **(감사처분)** 직무고발자 및 징계요구 대상자 외 비위행위자(46명)에 대해 감사 처분(경고·주의) 및 환수(14,058,560원) 조치
- **(대책강구)** 모호한 교통지원금 집행기준에 대해 관련 위원회를 통해 재정비 하고 향후 부정한 집행 등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
- **(후속조치)** 징계 및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령 관련자 등에 대해 「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」 및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자체 지침 등에 따른 후속조치(초과근무 명령 6개월 금지,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)를 이행하도록 통보